

## [기획논문] 판결문 내용 분석을 통해 본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

조혜민\*\*

### 초 록

본 연구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의 양상을 젠더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1심 판결문 152건을 검토하여 가해자·피해자의 특성, 범죄 행위, 재판 결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가해자는 159명이나 다수의 ‘성명불상’ 가해자가 존재해 수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피해자의 98.7%가 여성이었고, 주로 지인(40.25%)이나 연예인(25.78%)을 대상으로 하여 디지털 젠더폭력에서의 ‘친밀성’ 범주가 확장되었다고 보았다. 범죄행위로는 피해자의 SNS·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이용한 이미지 수집이 많았으며, 합성물 제작의 56.60%는 가해자가 직접 수행했다. 합성물은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를 조작하거나 모욕적인 문구,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형태로 여성 혐오적 특성을 보였다. 가해자의 18.24%는 텔레그램 운영자로 범죄 네트워크를 형성했으나, 판결문에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지 않아 법적 대응이 미흡했다. 전체 가해자의 88.68%가 성폭력처벌법을 적용받았고, 47.17%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연구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법적 대응의 한계를 지적하며, 향후 법적 대응 강화를 위해 페미니스트 범죄학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주제어 : 딥페이크 성범죄, 성적 합성물, 판결문 분석, 젠더 기반 폭력,  
페미니스트 범죄학

\* 심사과정에서 귀중한 논평과 제언을 해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경찰대 치안대학원 범죄학과 박사수료(hyeman0302@gmail.com)

## I. 서론

2024년 8월, 언론 보도를 통해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제작·유포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피해 대상은 학생, 교사, 군인, 간호사, 가족 등 다양했으며, 이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지속해 이어져 온 문제였다. 2019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n번방 사건')<sup>1)</sup>에서도 '지인 능욕' 범죄가 존재했으며, 그럼에도 '텔레그램을 사용하면 절대 안 잡힌다.'라는 가해자들의 인식 속에서 딥페이크 성착취 생태계는 더욱 견고해졌다.<sup>2)</sup>

이후 딥페이크 성범죄의 현황이 연이어 보고되었다. 교육부의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 현황 4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총 피해자는 833명으로, 이중 학생은 799명, 교사는 31명, 직원은 3명으로 확인되었다.<sup>3)</sup>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국회 보고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심의된 성적 허위영상물은 6,435건으로, 2023년 한 해(7,187건)와 비교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별로는 엑스(X, 구 트위터) 171건, 텔레그램 34건이었으며, 그밖에는 불법 사이트에서 유통되었다.<sup>4)</sup> 경찰청의 딥페이크 성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9월 25일까지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387명으로, 이중 약 98%(378명)가 남성이었다.<sup>5)</sup>

딥페이크 성범죄의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판결문을 검토한 보도도 이어졌다. 한겨레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반포 등)가 시행된 2020년 6월 25일을 기점으로 2024년 6월까지 해당 법의 위반 혐의가 포함된 105건의 1, 2심 판결문을 검토했다. 그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가 단순한 이미지 합성 이상의 다양한 성폭력 형태와 중첩되어있으며, 광범위한 피해에 노출

1) 2019년 2월경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거래,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일컫는다.

2) 한겨레(2024.09.06.). "엔번방 때도 있던 딥페이크, 국가 방관과 텔레그램이 키웠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57266.html>에서 2024.12.05 인출.

3) 뉴스핌(2024.09.30.). "학교 딥페이크 피해자 또 늘어 ... 누적 학생 799명·교사 31명",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930000629>에서 2024.12.05 인출.

4) 연합뉴스(2024.09.11.). "방심위 올해 성적 허위영상 시정 요구 6천 건 ... 작년 전체 육박", <https://www.yna.co.kr/view/AKR20240910053000017>에서 2025.01.30 인출.

5) 여성신문(2024.10.09.). "[단독]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98% 남성 ... 경찰, 성별 구분 통계 첫 공개",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980>에서 2025.01.30 인출.

되고 있는 현실을 확인했다.<sup>6)</sup> 또한 김남희 의원실이 지난 2020년 딥페이크 성 착취물 처벌 강화법 시행 이후 대법원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관련 사건 중 40%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피해자는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또한 연예인, 지인, 친척, 동창, 일면식 없는 사이 등으로 무분별하게 나타났다.<sup>7)</sup>

앞선 판결문 분석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양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개별 사건 중심으로 다루져 범죄 실태가 분석되거나 유형화되지 못한 한계가 있어 향후 연구적 논의로 발전시키기에는 아쉬운 지점이 존재했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임에도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모욕죄) 등이 적용된 사례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더욱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가령 가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주장하여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다른 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법원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합성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여타 법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1심 판결문을 분석하여 젠더적 관점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법적 해석과정에서의 젠더 불평등이 작동하는 방식을 조명하고자 한다. 페미니스트 범죄학의 관점에서 성폭력은 여성을 통제하고 복종을 유도하는 폭력행위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폭력적인 남성성에 주목해야 한다.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법적 규정의 미비와 낮은 형벌,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편견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가부장적 통제 메커니즘이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윤옥경, 2022:322-323). 이러한 관점에서 판결문 분석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제한적이나 실증적으로 이해하는 기초 작업이며, 법적 해석과정에서 젠더 불평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드러내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많은 범죄학자는 가부장제가 존재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지만, 실제로 그것이 왜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 생겨나는지는 구체화하지 않는다는 점(Ogle and Batton, 2009:174)을 고려할 때, 판결문 분석에서 젠더적 관점으로 이러한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된 1심 판결문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시도했다. 판결문은 딥페이크

6) 한겨레(2024.12.17.). “인격 살해 범죄 ‘딥페이크’ … 성범죄물 확대·재생산에 신상 퍼뜨려”,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73459.html>에서 2025.01.01 인출.

7) 김남희 의원실(2024.09.06.), “[국정감사 보도자료] 딥페이크 범죄 제작해 판매해도 솜방망이 처벌 … 딥페이크 판결, 집행유예 40%에 육박”, <https://blog.naver.com/kimnamhee2027/223574300908>에서 2024.12.15. 인출.

성범죄와 관련한 법률 시행 변화를 고려하여 2020년 6월 25일부터 2024년 10월 15일로 설정했고, 검색 방법의 경우, ‘딥페이크’라는 용어가 적극적으로 판결문에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검색어로 ‘딥페이크’, ‘합성사진’, ‘합성영상’, ‘허위사진’, ‘허위영상’을 설정하여 검색하였다. 변수로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 가해자·피해자의 특성 변수, 범죄행위에 대한 변수, 재판 결과에 대한 변수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판결문에 나타난 딥페이크 성범죄의 실태를 정리하여 젠더적 관점으로 분석하며 논의해야 할 과제를 제안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기존 연구

딥페이크 성범죄에 관한 국내 연구는 형사법적 쟁점, 정책적 대응 방안, 사회현상학적 연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형사법적 연구의 경우, 사법적 동향과 형사책임(김재현, 2021; 장우정·김주찬, 2020; 홍태석, 2020), 형사법적 대응(윤지영, 2024), 그리고 위장 수사(홍영선·권현영, 2021; 장응혁, 2024)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는 기술 매개 젠더기반폭력의 관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정책을 분석(김수아, 2024)하거나 가해자 분석을 통해 정책적 방안을 제시(염건웅, 2024)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성인지적 관점에서 디지털 성범죄 판례를 분석하여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김정혜 외, 2024). 사회현상학적 연구로는 딥페이크를 포함한 온라인 성적 괴롭힘 등 사이버 성폭력 실태를 분석한 연구(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2019), 디지털 성범죄 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연구(박은하, 2023), 교육부의 청소년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인식조사<sup>8)</sup> 분석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범죄 발생의 맥락과 양상,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하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형사사법 체계 및 국가적 대응 체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는 실증적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되어왔음

8) 교육부 보도자료(2024.12.11.), “청소년의 89.4%,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을 범죄로 인식”,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4107978>에서 2025.03.09. 인출.

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성원(2023)은 경찰의 주요 불법 합성물 검거 사례를 분석하여 기존에는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하여 제작·유포하는 방식으로 일반인을 피해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장다혜·김수아(2018)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및 디지털성폭력아웃의 피해상담 일지를 분석하여 딥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한 이미지 기반 온라인 성폭력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는 전형적인 여성 대상 폭력이며, 특히 관계적 폭력의 양상임을 확인했다. 또한, 피해 여성의 성적 실천이나 일상생활을 제약하는 차별적 효과를 초래하며, 비동의의 이미지 유포를 통해 성적 소비문화를 확산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러한 실증적 연구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실태를 이해하고 구조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현재 연구에서 다루는 사례들이 기존에 분석된 자료에 집중되면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그 외의 실증적 자료를 활용하여 범죄 양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을 통해 판결문을 수집·분석하는 방법이 실증적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나 학계에서 연구되지 못한 가운데 최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편집 등)에 해당하는 1심 판결문을 바탕으로 미디어 플랫폼 속 성적 인격권이 침해되는 양상을 살펴본 연구(한민경, 2024)가 있었다.

한민경(2024)은 기존의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에 관련 법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교묘한 영상보다 조잡한 합성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행위는 대부분 비전문적으로 이루어지며, 복수의 가해자가 편집·반포 역할을 분담하고, 미디어 플랫폼을 이원화하여 이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한 언론매체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된 판결문을 검토하여 보도 한 바 있으나, 특정 검색어를 통해 판결문을 조사하는 방식에 그쳤거나<sup>9)</sup>,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1, 2심 판결문의 특징을 정리하였다.<sup>10)</sup>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에 적용되는 판결문에 제한하여 살펴보거나 단편적인 보도에 그쳐

9) 한겨레(2022.06.26.). “딥페이크 처벌법 시행 2년, 가해자들은 ‘아는 사람’을 노렸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48543.html>에서 2025.01.01 인출.

10) 한겨레(2024.12.17.). “인격 살해 범죄 ‘딥페이크’ … 성범죄물 확대·재생산에 신장 퍼뜨려”,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73459.html>에서 2025.01.01 인출.

딥페이크 성범죄의 구체적인 양상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판결문을 더욱 넓게 수집하고, 젠더적 분석을 통해 해당 범죄에 대한 양상을 드러내어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 2. 개념적 정의: ‘딥페이크 성범죄’

달리(Kathleen Daly)와 체스니-린드(Meda Chesney-Lind)는 범죄학에서 페미니스트 이론의 중요한 목적은 “남성 경험에 바탕을 둔 범죄학 이론에 대비되는, 여성의 인식 방법에 기반한 이론을 제시하는 것”(Daly and Chesney-Lind, 1988:490)이라고 보았다. 이는 범죄를 분석할 때, 성별에 따른 권력 차이를 중요하게 인식해야 하며, 범죄와 형사사법 체계에서의 남성성에 주목하고, 젠더 불평등을 비롯한 사회구조적 특성 하의 범죄로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개념적 정의를 명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기술 매개 성폭력(Technology-facilitated sexual violence) 개념이 등장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가 사이버 공간에서 확산하였고,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성범죄 개념이 이미지 기반 성적 학대, 온라인 성적괴롭힘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다(김한균, 2020:373).

그 과정에서 딥페이크 기술<sup>11)</sup>이 대중에게 알려진 계기는 2017년 말, ‘딥페이크스(deepfakes)’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여러 유명 여성 배우들의 얼굴을 포르노 영상 속 여성 배우의 얼굴과 바꾼 영상을 웹사이트인 레드잇(Reddit)에 게시하면서였다. 한국 또한 한 여성 연예인의 얼굴이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 관심이 증가했다(최순욱·오세욱·이소은, 2019:365).

기술적 관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정의하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범죄로 한정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성적 합성물 제작에는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술이 활용되며, ‘딥페이크 성범죄’라는 용어가 단순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범죄를 넘어, 성적 합성물을 활용한 범죄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성범죄가 이미 범죄로 규정되어있음에도 ‘딥페이크 성범죄’라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한 것은, 성범죄

11) ‘딥페이크(Deepfake)’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죄 개념이 확장되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성범죄를 주로 물리적 접촉이 수반되는 범죄로 여겼으나,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이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도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이 등장하면서 성범죄의 개념과 규범이 변화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법적 해석과도 연결된다. 한국에서는 2020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특정인의 신체를 성적 이미지로 변형·합성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수작업으로 제작된 성적 합성물도 포함하였다. 이는 성적 합성물 범죄에서 핵심이 기술적 방식이 아니라 성적 합성 그 자체임을 명확히 하며, 향후 인공지능 외의 기술을 이용한 합성물이 등장할 가능성까지 고려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딥페이크 성범죄는 기존의 성적 합성물 범죄와 별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2010년대 중반부터 문제가 제기된 소위 ‘지인 합성’(개인의 이미지와 성적 이미지를 합성하여 유포하는 행위)이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심화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수아, 2024).

이러한 이유로 학계와 언론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단순히 AI 기술 기반 범죄로 한정하기보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적 합성물 범죄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 기관에서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센터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본인의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합성·편집되어 성적 허위이미지·영상물로 유포되는 피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sup>12)</sup>,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딥페이크 성착취물(합성 편집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sup>13)</sup> 즉 ‘딥페이크 성범죄’라는 개념은 기술적 정의를 넘어 현재는 디지털 성적 합성물 범죄를 포괄하는 영어로 자리 잡았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딥페이크 성범죄’를 ‘개인의 동의 없이 얼굴, 신체 등을 합성하여 성적 이미지나 영상을 제작,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한 범죄’로 정의하고자 한다.

12)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안내]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상담 안내”, <https://www.bwyf.or.kr/mindclick/selectBbsNttView.do?key=2910&bbsNo=91&nttNo=62298>에서 2024.12.05. 인출.

13)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d4u.stop.or.kr/>에서 2024.01.31. 인출.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개요

본 연구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양상을 젠더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현실에서 범죄를 유발하는 사회적 요인을 그대로 반영하여 가해와 피해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김한균, 2017:305). 왜곡된 성인식과 성차별적인 문화, 권력 차이 등으로 인해 젠더기반폭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딥페이크 성범죄 또한 젠더기반폭력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판결문 내용 분석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의 경우, 한민경(2024)의 연구와 김중곤(2024)의 판결문 분석 연구를 참고하여, 딥페이크 성범죄 판결문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구체적으로, 가해자·피해자의 특성, 범죄행위, 재판 결과에 대한 변수를 중심으로 판결문을 검토하여, 딥페이크 성범죄의 실태를 정리하였다.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나타난 개인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드러내고, 범죄 수법 및 상황적 맥락을 파악하며, 판결 내용의 함의를 정리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 2. 분석자료

분석자료는 전국 지방법원에서 다뤄진 딥페이크 성범죄의 1심 판결문이다. 판결문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판결서 인터넷 열람(형사)’ 서비스를 통해 검색 및 열람하였다. 분석 기간은 2020년 6월 25일부터 2024년 10월 15일로 설정하였다.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법률의 변화와 시행 시기를 반영한 것이다.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 이후 성폭력처벌법 제14조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가 신설되고 2020년 6월 25일 자로 시행되어 ‘지인 합성’ 범죄가 법적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이 ‘반포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 가능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가 신설되어 2024년 10월 16일에 시행되었다.

검색 방법으로는 ‘딥페이크’라는 용어가 적극적으로 판결문에 사용되지 않



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검색어로 ‘딥페이크’, ‘합성사진’, ‘합성영상’, ‘허위사진’, ‘허위영상’을 설정하여 함께 검색하였다. 검색 결과, 해당 용어가 포함된 판결문을 수집하였고, 범죄 양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중복될 가능성을 고려해 1심 판결문으로 제한하였다. 이에 검토한 판결문은 총 189건이며 이중 딥페이크 성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건을 제외하고 최종 152건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3. 변수설정 및 분석

딥페이크 성범죄 판결문을 반복적으로 검토하며 범죄의 양상과 패턴을 파악하고자 연구 변수를 결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살펴본 변수는 크게 (1) 가해자·피해자의 특성 변수, (2) 범죄행위에 대한 변수, (3) 재판 결과에 대한 변수이다.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을 중심으로 첫째, 가해자·피해자의 특성의 경우, 가해자의 수, 피해자의 성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둘째, 범죄의 행위에 대한 변수의 경우, 합성에 이용되는 이미지의 수집 방식, 합성 제작과정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합성물의 사용 방식을 살펴보았다. 셋째, 재판 결과의 경우, 법원에 의해 인정된 죄종, 형량을 정리하였다. 이처럼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정리하는 가운데 젠더적 관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의 실태를 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 IV. 연구 결과

### 1. 가해자·피해자의 특성

판결문에는 가해자의 성별과 연령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가해자가 범행 당시 소년이었을 경우, 참작 사유로 언급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통해 확인된 가해자 중 소년은 총 24명(15.09%)이다.<sup>14)</sup> 전체 판결문 152건에서 확인된 가해자의 수는 159명이며 단수의 가해자가 확인된 건은 147건, 복수의 가해

14) 한민경(2024:70)은 허위영상물 편집·배포 관련 피의자의 상당수가 10대이나 많은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되어 판결문 검색자료에는 해당 사건들이 제외되어있음을 지적하였다.

## 14 여성연구

자가 확인된 건은 5건이었다.

〈표 1〉 가해자의 수

가해자의 수	빈도(건)	비율(%)
1명	147	96.71
2명	4	2.63
3명	0	-
4명	1	0.66
합계	152	100.00

복수의 가해자가 확인된 사건에서는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저지르는 방식이 확인되었다. 합성물을 만들어 게시·판매하거나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자 역할을 맡아 딥페이크 성범죄를 공모했는데 예를 들어, 가해자 A는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합성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역할, 가해자 B는 수익금을 현금화하는 역할을 맡았다.<sup>15)</sup> 또는 친구 사이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여 합성물을 판매하는 사례도 있었다.<sup>16)</sup>

텔레그램 채널 운영과 참여 사례도 확인되었다. 가해자 A는 직접 사진을 합성한 후, 본인이 운영하는 채널에 반포했고, 가해자 B, C, D는 해당 채널을 구독하며 합성물을 소지한 사례가 있다.<sup>17)</sup> 다른 사건에서는 두 명의 가해자가 함께 그룹대화방에 회원으로 참여하다가, 한 명이 합성물을 게시하여 반포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운영한 경우도 있었다.<sup>18)</sup>

이외에도 합성물 제작 및 게시를 의뢰하는 형태의 범행이 존재했다. 예를 들어, 가해자 A가 가해자 B에게 특정 피해자의 사진을 보내 합성을 요청하였고, 가해자 B는 피해자의 얼굴을 불상의 여성 나체 사진과 합성하여 전송했다. 또한 가해자 A는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 사진을 전송하며 게시를 요청했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성적으로 합성해 특정 계정에 게시하였다.<sup>19)</sup>

이처럼 판결문에는 〈표 1〉에 없는,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수많은 ‘성명불상’ 가해자가 등장한다. 판결문에 명시된 가해자는 이들에게 합성물 제작 또는 계

15) 부산지법 2021.06.11. 선고 2021고합4 판결.

16) 울산지법 2021.11.19. 선고 2021고합159 판결.

17) 인천지법 2023.08.18. 선고 2022고합1137 판결.

18) 인천지법 2023.10.20. 선고 2023고합168 판결.

19) 서울북부지법 2023.03.22. 선고 2022고단4313 판결.

시를 직접 의뢰했거나, 또는 이들로부터 합성을 의뢰받아 제작하기도 하였다. 즉,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자들 간의 협력적이며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들 중 상당수가 수사 과정에서 특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판결문에서 확인된 가해자의 수가 실제 범죄 양상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시사한다.

한편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 달리 피해 인원을 특정하기 어려웠다. 일부 판결문에서는 단수 혹은 복수의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되었으나, 상당수의 판결문은 피해 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 과도 맞닿아있다. 합성물이 수백, 수천 개 이상 제작될 경우, 피해자를 개별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성명불상’ 피해자로 남거나 ‘피해자 없는 범죄’로 여겨지는 것이다.

또한 피해 규모가 확인되더라도(연예인, 여성 BJ 54명<sup>20)</sup>) 판결문에 개별 피해자의 연령이 명시되지 않아 전체적인 연령 분포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단독으로 특정된 판결문에 한정해 분석한 결과, 10대 피해자가 28명(42.42%)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피해자가 21명(31.82%)으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전체 판결문 152건 중 남성 피해자로 나타난 사례는 단 2건이었다. 나머지 150건에서는 피해자가 모두 여성이었으며,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명백히 젠더화된 폭력임을 시사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피해자는 연예인(유명인, BJ), 친밀한 관계(전 애인, 애인), 동창, 가족 등이며, 한 명의 가해자가 다수의 다양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지인(친밀한 관계, 동창 등)을 대상으로 한 가해자는 64명(40.25%), 이중 친밀한 관계(전 애인, 애인)는 11명(6.92%)이었다. 또한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가해자는 41명(25.78%)으로, 그 중 아동·청소년 연예인을 포함한 경우는 9명(5.66%)이었다.

이처럼 가해자가 주로 여성 지인과 여성 연예인을 범행 대상으로 하는 점은 디지털 환경에서 ‘친밀성’의 개념이 재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히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던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이 온라인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다. 디지털 기술이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을 부여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난 적이 없어도 디지털을 통해 일방적인 친밀감을 형성하고 범죄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 ‘친밀성’의 범주를 확장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기존의 성차별적 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

20) 마산지원 2022.04.27. 선고 2021고단1040 판결.

한다. 따라서 디지털 환경에서 젠더기반폭력이 어떻게 발생하고, ‘친밀성’의 개념이 범죄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2. 범죄행위

본 연구에서 검토한 판결문은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가 시행되기 전이다. 이에 판결문에 나타난 딥페이크 성범죄 양상은 크게 다음과 같다. 텔레그램 그룹방을 운영·관리하는 경우, 합성물을 제작하여 제공·판매하는 경우, 합성물을 요청하는 경우, 합성물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범죄 행위는 단독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여러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분석 결과는 피해자의 이미지가 수집되는 방식, 합성물 제작 양상 및 이용 실태, 텔레그램 그룹방 운영자·부관리자의 운영방식에 초점을 맞춰 정리하였다.

### 가. 피해자 이미지 수집 방식

연예인 및 유명인을 피해 대상으로 한 경우, 이미지 수집 방법이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가운데 가해자 42명의 피해자 이미지 수집 방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피해자의 SNS·카카오톡의 프로필 사진을 통해 수집한 경우가 22명(13.84%)이었고, 이 중에는 SNS 친구 추천 기능을 악용해 불특정 다수 여성의 정보를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sup>21)</sup>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미지를 수집한 경우도 7명(4.40%) 있었다. 가해자들은 호텔 객실에 로그인된 개인 계정을 이용하거나,<sup>22)</sup>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는 경우<sup>23)</sup>도 있었다. 또한 학교 근로장학생 신분을 이용해 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재학생의 사진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방식<sup>24)</sup>도 있었다. 한편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이미지를 준 경우는 전체 가해자 중 3명(1.89%)에 불과했다.

21) 남원지원 2021.06.01. 선고 2020고단363 판결.

22) 수원지법 2023.06.08. 선고 2022고합945 판결.

23) 의정부지법 2022.11.18. 선고 2022고단2291 판결.

24) 대구지법 2021.02.04. 선고 2020고단4140 판결.

## 나. 합성물 제작 방식

가해자 90명(56.60%)이 직접 합성물을 제작했다. 이 중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경우가 22명(13.84%),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가 14명(8.81%)이었다. 텔레그램 봇 계정을 이용한 경우는 2명(1.26%)이며, 그중 1명은 포토샵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사용했다.

합성물 제작 방식은 크게 합성 프로그램, 합성 사이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많은 경우, 핸드폰 등 접근성이 높은 기기나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이 이뤄졌다. 또한 36명(22.64%)은 SNS 및 텔레그램 등온라인에서 합성물을 제작해준다는 홍보글을 통해 의뢰하였고, 이중 2명은 이후 직접 제작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합성물 제작이 보편화되었으며,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의 규제만으로는 범죄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드러낸다.

성적 합성물은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 이미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이용하여 눈을 위로 치켜뜬 모습으로 합성한 이른바 ‘아해가오’<sup>25)</sup> 이미지나, 피해자가 호텔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처럼 조작된 합성물도 제작되었다. 또한 피해자의 얼굴에 정액이나 남성 성기를 합성하여 모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유포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합성물과 함께 피해자의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거주 지역, 출신 또는 재학 중인 학교, 직업, 아르바이트 장소 및 시간, 전화번호, SNS 주소 등)가 공개되거나 성적으로 모욕적인 표현(‘개보지’, ‘후장걸레’, ‘성상납중’, ‘걸레-섹스하는 년’, ‘창녀’ 등)이 포함된 해시태그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이미지 조작을 넘어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고 조롱과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여성혐오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혐오를 ‘여성에 대한 멸시이자 여성을 성적 도구로만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김은주, 2016:105)’이라고 볼 때, 앞선 판결문의 사례들은 사회에 만연해있다. 실제로 여성 연예인들은 ‘00녀’ 등의 키워드로 소비되며 성적 대상화된 바 있으며<sup>26)</sup> 텔레그램 성

25) ‘아해가오’ 사례의 경우, 적용법조에 따라 판결이 달라졌다. 광주지법 2021고합44 판결에서는 피해자들이 눈동자를 위로 치켜뜨는 모습의 영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된 것’이라는 확신까지는 들지 않는다고 판단해 ‘아해가오’ 표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2023고단796 판결에서는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에 따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청주지법 2022고단1909 판결에서는 ‘아해가오’ 뿐만 아니라 ‘몸합’, ‘벗기기’, ‘아해+일싸’ 등의 채널을 각각 운영하며, 연예인과 지인을 대상으로 합성물을 제작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허위영상물 편집·반포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6) 오마이뉴스(2023.01.12.). “‘국민 ○ ○녀’라니 … 수지의 용기있는 반격”, <https://omn>.

착취 사건에서도 성착취물이 공유되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의 신상이 함께 공개되었다. 헤어진 연인의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하고 있다.

#### 다. 합성물 이용 실태

가해자가 합성물을 텔레그램 채팅방에 반포하는 경우는 56명(35.22%)이었다. 판결문에서 ‘익명성과 보안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연결망 서비스’ 또는 ‘그룹 채팅방’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텔레그램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도 있어 실제 수치는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홈페이지나 SNS 계정에 합성물을 게시한 경우는 45명(28.30%)이며, 피해자 또는 피해자 지인에게 전송하거나 유포 협박을 한 경우는 15명(9.43%)이었다.

대체로 채팅방을 통해 반포하는 양상이 확인되는 한편 피해 대상에 따라 합성물을 이용하는 방식에서의 차이가 나타났다. 피해자가 연예인일 경우, 주로 텔레그램 그룹방을 통해 공유되었다. 반면, 피해자가 지인일 경우, 피해자·피해자 지인에게 전송하거나<sup>27)</sup>, SNS에 모욕적인 글과 함께 게시하며<sup>28)</sup>, 협박하는 방식<sup>29)</sup>으로 이용되었다. 특히 직장 동료로 대상으로 한 경우, 회사 공용컴퓨터 또는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이들이 합성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sup>30)</sup>

또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하여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하려고 했던 사례도 있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성물을 전송하였고, 피해자의 원서접수 계정에 불법으로 접속해 원서를 취소하였다. 피해자가 심리적인 혼란과 두려움을 겪으면 가해자에게 도움을 구할 것이며, 가해자는 ‘해결자’로서 역할을 하며 피해자와 가깝게 지낼 수 있음을 기대한 것이 범행 원인이었다.<sup>31)</sup>

특히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인 경우, 주로 합성물은 연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모욕하고 협박하며 이용되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트위터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합성물, 모욕적인

---

kr/22dix에서 2025.03.07 인출.

27) 평택지원 2023.03.29. 선고 2022고단2481 판결.

28) 평택지원 2024.04.24. 선고 2023고단2862 판결.

29) 속초지원 2021.06.16. 선고 2020고단474 판결.

30) 안산지원 2023.05.24. 선고 2022고단3554 판결.

31) 전주지법 2021.04.28. 선고 2021고단252 판결.

글을 게시한 사례<sup>32)</sup>가 있었다. 다른 사례 또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헤어질 경우, 합성사진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sup>33)</sup>도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딥페이크 성범죄는 합성물을 넘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협박, 신상 털기, 스토킹 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피해자의 삶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형태의 범죄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라. 텔레그램 그룹방 운영방식

가해자 29명(18.24%)이 텔레그램 그룹방 운영자 또는 부관리자로 확인되었다. 이 중 15명은 연예인을 피해 대상으로 하였고, 9명은 아동·청소년 연예인을 포함하였다.

텔레그램 그룹방 운영방식은 다양했다. 가해자들은 합성물 공유 그룹방을 운영하거나 동시에 다른 그룹방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모아둔 방도 운영했다.<sup>34)</sup> 또한, 합성 대상에 따라 그룹방을 나누거나 합성 방법 정보를 공유하는 방, 그룹방 운영 방식에 대해 상의하는 방, 여타 범죄 정보를 공유하는 방 등을 따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구체적인 양상은 아래와 같다.

① ‘C’에서는 연예인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한 합성물을 게시 및 공유하고, ② ‘D’에서는 인터넷 방송인 E 또는 F 등의 방송 진행자(‘스트리머’, ‘BJ’라고 불림)의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하여 게시 및 공유하고, ③ ‘G’에서는 성인 음란물을 공유하고, ④ ‘H’에서는 음란물 합성에 사용되는 모바일앱 등 정보나 이용기법 등 정보와 합성물을 공유하고, ⑤ ‘I’에서는 몰래카메라 등 각종 도촬물을 공유 및 게시하고, ⑥ ‘J’에서는 음란물 애니메이션 스틸컷 등을 공유 및 게시하고, ⑦ ‘K’에서는 주변인의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한 합성물을 공유 및 게시하고, ⑧ ‘L’에서는 텔레그램 그룹방 운영에 대하여 상의하는 등 총 8개의 그룹 채팅방을 운영하며 약 60여 명의 회원과 성착취물, 허위영상물, 도촬물, 음란물 등을 거래 및 공유하였다.

(자료: 제주지법 2021.08.12. 선고 2021고합60 판결문 발췌)

SNS에서 유명한 K의 얼굴과 다른 여성의 성행위 사진을 편집·합성한 사진 등을 게

32) 대전지법 천안지원 2021.06.18. 선고 2021고단164 판결.

33) 속초지원 2022.05.12. 선고 2022고합5 판결.

34) 대전지법 2023.10.20. 선고 2023고단1784 판결.

시하는 'L', 'J' 등에서 채팅 6,000개 이상 게시 또는 K의 지인임을 인증하면 들어갈 수 있는 'M', 특정 소수의 회원들만이 참여하여 음란물을 공유하는 'N', 마약이나 불법 스포츠 토트 등의 판매를 홍보하는 'O'와 'P' 등을 함께 운영하였다.

(자료: 제주지법 2021.11.25. 선고 2021고합142 판결문 발췌)

이처럼 조직범죄로서의 운영방식은 운영자가 없어도 네트워크가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 그룹방이 폐쇄되더라도 기존에 운영하는 다른 그룹방에서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거나 개별 익명의 가해자들을 통해 네트워크 자체는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텔레그램 그룹방의 운영자 또는 부관리자로 확인된 가해자 29명의 판결문에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들(N번방, 박사방)의 경우,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온라인상의 조직이라 하더라도 방식과 죄질에 집중하여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선례가 있는 만큼 딥페이크 성범죄 또한 기존의 법적 대응 방식을 넘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이는 디지털 조직범죄의 개념을 젠더기반폭력의 실태를 바탕으로 새롭게 정의하는 등 법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 3. 재판 결과

범죄행위를 한 범죄자에게 처벌이 내려지는 과정은 한 사회와 사법 체계가 그 범죄행위와 범죄자를 어떠한 철학과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알 수 있게 한다는 점(박미랑, 2022:396)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판결문을 바탕으로 법원에 의해 인정된 죄종을 정리하였고, 아래 <표 2>와 같다.

가해자 159명에게 각각 인정된 죄종을 검토한 후, 크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로 나눠 정리하였다. 이외 모욕, 협박, 사기 등 기타 죄종 또한 적용되기도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2〉 법원에 의해 인정된 죄종

청소년 성보호법	성폭력 처벌법	정보 통신망법	아동 복지법	스토킹 처벌법	빈도 (명)	비율 (%)
✓					9	5.66
✓	✓				28	17.61
✓		✓			2	1.26
✓			✓		1	0.63
✓	✓	✓			23	14.47
✓	✓	✓	✓		2	1.26
✓	✓			✓	1	0.63
✓	✓		✓		4	2.52
✓	✓	✓		✓	1	0.63
	✓				58	36.48
	✓	✓			21	13.21
	✓			✓	2	1.26
	✓	✓		✓	1	0.63
		✓			6	3.77
합계					159	100.00

분석 결과, 성폭력처벌법에 인정된 경우가 36.48%(58명)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에 인정된 경우 17.61%(28명),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에 인정된 경우로 14.47%(23명)이다.

각각의 죄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리할 경우, 전체 가해자 중 88.68%(141명)가 성폭력처벌법에 적용되었고 그다음으로는 44.65%(71명)가 청소년성보호법, 35.22%(56명)가 정보통신망법, 4.40%(7명)가 아동복지법, 3.14%(5명)가 스토킹처벌법에 적용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성폭력처벌법에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즉 딥페이크 성범죄임에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가해자의 의도, 합성물의 내용에 대한 법원의 해석 등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지는 상황을 드러낸다.

가해자의 형량을 정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실형은 68명(42.77%)으로 최소 6개월부터 최대 12년까지 분포는 다양했다. 평균 형량 값을 내는 등 형량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시도할 수 없었는데 이는 사건마다 적용법조가 각각 다르고, 처벌 기준과 법정형 또한 다르기에 단순 비교할 경우,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유예는 75명(47.17%)이다. 벌금형은 11명(6.92%)으로 최소 3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이다. 기타(무죄, 선고 유예)의 경우, 5명(3.14%)으로 확인되었다. 형량 이외 처분으로는 사회봉사 36명(22.64%), 성폭력 치료 강의 114명(71.70%),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9명(18.24%), 취업제한 92명(57.85%), 보호관찰 18명(11.32%)으로 확인되었고, 가해자에 따라 복수의 조치를 받는 경우들도 있었다.

〈표 3〉 형량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기타(무죄, 선고 유예)	계
명	68	75	11	5	159
(%)	42.77	47.17	6.92	3.14	100.00

한편 전체 가해자 중 절반에 가까운 정도가 집행유예를 받은 결과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집행유예를 받은 75명의 양형 사유를 살펴본 결과, 69명이 ‘초범’,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 고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범죄의 심각성 정도가 상당한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가령 4명의 가해자가 명시된 판결문에서 가해자 A는 텔레그램 채널을 만들어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이자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하여 성적인 영상물을 총 71개 제작하고, 가해자 B, C, D는 이 채널을 구독하며 소지하였으나, 이들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점이 양형 사유였다.<sup>35)</sup> 또한 텔레그램 채널을 직접 운영하며 여성 연예인을 대상으로 2,022개의 성적인 영상물을 제작하고, 2,071개를 판매한 가해자 또한 추징금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협조하였으며, 초범인 점이 참작되었다.<sup>36)</sup> 이는 한편 피해자 요인보다는 범죄자 요인(진지한 반성, 전과 여부 등)이 성범죄 집행유예 양형에 유의미한 인자로 나타나고 있는 결과(박미랑·이민식, 2014)와 유사하다.

그밖에 양형 사유로 다수 언급된 것은 ‘피해자들의 특징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합성사진이 조잡하고 유포 범위가 제한된 경우’였다. 이는 판결 과정에서 가해자가 온정적으로 대우받는 논리가 팽배한 가운데 피해 경험에 대한 적극

35) 인천지법 2023.08.18. 선고 2022고합1137 판결.

36) 진주지원 2023.06.08. 선고 2023고단182 판결.

적 해석이 아닌 기술적 특수성의 세심함 여부를 더욱 중시하여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낮은 형벌은 오랫동안 가부장적 통제 메커니즘으로 작용해온 점(Belknap, 20009:227)을 고려할 때, 형벌의 응보 목적을 넘어 이 같은 재판 결과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이 사법적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 V. 결론

본 연구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의 양상을 젠더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해당 범죄에 대한 이해를 높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론적 배경으로 페미니스트 범죄학을 적용하여 판결문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1심 판결문 152건을 검토하여 가해자·피해자의 특성, 범죄행위, 재판 결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가해자는 총 159명이며, 그 외 다수의 가해자가 ‘성명불상’으로 기록되어 있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전체 판결문 152건 중 150건에서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었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지인이 40.25%, 연예인이 25.78%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 젠더폭력과 친밀성의 범주가 어떻게 범죄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범죄행위로는 피해자의 SNS·카카오톡 프로필사진을 이용한 이미지 수집이 많았으며, 합성물 제작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하는 비율이 56.60%로 가장 높았다. 합성물은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체를 조작하거나 모욕적인 문구,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형태로 제작되었다. 이는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고 조롱과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여성 혐오적 행위임을 보여준다. 또한 합성물 유포 방식은 피해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연예인의 경우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유포됐지만, 지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피해자에게 직접 전송하거나 협박 용도로 활용되었다.

한편 전체 가해자 중 18.24%는 텔레그램 운영자 또는 부관리자로, 합성물을 유포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필요한 정보를 나누는 여러 그룹방을 운영하여 범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판결문에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법적 대응 방식이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디지털 조직범죄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는 등 법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재판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가해자 중 88.68%가 성폭력처벌법을 적용 받았으나, 모든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가 성폭력처벌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즉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의도, 합성물의 내용 등에 대한 법원의 해석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지는 상황이다. 가해자의 형량을 보면, 47.17%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양형 사유로는 피해자 요인보다 가해자의 초범 여부 등이 더 크게 고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판결문 분석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의 양상을 드러내고 이를 젠더적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딥페이크 성범죄의 실태를 실증적 자료와 학문적 논의를 통해 뒷받침하였으며, 향후 형사사법 체계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를 제안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한국적 맥락에서의 딥페이크 성범죄, 연구 동향, 언론 보도 양상에 집중하였기에 해외 사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또한 페미니스트 범죄학의 관점으로 비판적 분석을 시도했으나, 판결문 내용 분석을 통한 실태 정리에 초점을 맞추면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못한 한계도 있다. 예를 들어, 판결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어떻게 다뤄졌는지, 법체계와 재판 과정에서의 젠더 불평등이 내포되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점은 가해자 외에도 ‘성명불상’으로 기록된 가해자들이 존재하며, 피해자 외에도 피해자로 고려되지 않은 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수사과 재판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범죄의 규모가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 더욱 크고 다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판결문에서 ‘불상’으로 기록된 가해자와 피해자의 존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회적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향후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본 연구를 시작으로 페미니스트 범죄학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교육부 보도자료(2024.12.11.). “청소년의 89.4%,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을 범죄로 인식”.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4107978>에서 2025. 03.09. 인출.
- 김남희 의원실(2024.09.06.). “[국정감사 보도자료] 딥페이크 범죄 제작해 판매해도 솜방망이 처벌 … 딥페이크 판결, 집행유예 40%에 육박”. <https://blog.naver.com/kimnamhee2027/223574300908>에서 2024.12.15. 인출.
- 김수아(2024). “기술 매개 젠더 기반 폭력의 관점에서 본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정책”. *이화젠더법학*. 제16권 제3호. 187-224.
- 김은주(2016). “여성혐오(misogyny) 이후의 여성주의(feminism)의 주체화 전략: 혐오의 모방과 혼종적(hybrid) 주체성”. *한국여성철학*. 제26권. 103-130.
- 김재현(2021). “딥페이크(deep fake)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입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243-276.
- 김주찬·장우정(2020). “딥페이크 합성물에 대한 국내외 입법동향과 형사법적 수용 문제 - 딥페이크 포르노(Deepfake Pornography)를 중심으로 -”. *소년보호연구*. 제33권 제2호. 273-306.
- 김정혜·김효정·동제연·민고은·이은심(2024). *디지털 성범죄 판례의 성인지적 분석: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유포 관련 범죄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중곤(2024).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의 실태 - 주도형 DFSA에 대한 판결문 내용분석 -”. *경찰학연구*. 제24권 제1호. 53-87.
- 김한균(2017). “‘4차 산업혁명’의 형사정책”. *형사법의 신동향*. 제55호. 283-315.
- \_\_\_\_\_(2020). “디지털성범죄 차단과 처단 - 기술매개 젠더기반 폭력의 형사정책 -”. *저스티스*. 제178호. 369-392.
- 뉴스핌(2024.09.30.). “학교 딥페이크 피해자 또 늘어 … 누적 학생 799명·교사 31명”,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930000629>에서 2024.12.05. 인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4.11.06.). “[브리핑 자료]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59054>에서 2024.12.02. 인출.
- 박미랑·이민식(2014). “강제추행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에 있어 동종전과와 진지한

- 반성의 영향력: 상해가 발생한 13세 이상 피해자 대상 사건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5권 제3호. 379-406.
- \_\_\_\_\_(2022). “제13장 법원, 교정과 범죄예방”. 범죄학개론. 박영사. 392-416.
- 박은하(2023). “디지털 성범죄 가해청소년의 범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교  
정담론. 제17권 제1호. 185-223.
-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안내]딤페이크 성범죄 피해상담 안내”.  
[https://www.bwyf.or.kr/mindclick/selectBbsNttView.do?key=2910  
&bbsNo=91&nttNo=62298](https://www.bwyf.or.kr/mindclick/selectBbsNttView.do?key=2910&bbsNo=91&nttNo=62298)에서 2024.12.05.인출.
- 신성원(2023). “딤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  
정논집. 제20권 제4호. 147-168.
- 장다혜·김수아(2018).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변화에 따른 처벌 및 규제 방안. 한  
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장응혁(2024). “성인 대상 딤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도입 검토”. 범죄수사  
학연구. 제10권 제3호. 5-24.
- 여성신문(2024.10.09.). “[단독] 딤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98% 남성 … 경찰, 성별  
구분 통계 첫 공개”.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  
html?idxno=252980](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980)에서 2025.01.30. 인출.
- 연합뉴스(2024.09.11.). “방심위 올해 성적 허위영상 시정요구 6천건 … 작년 전체  
육박”. <https://www.yna.co.kr/view/AKR20240910053000017>에서  
2025.01.30 인출.
- 염건웅(2024). “딤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 분석을 통한 정책적 대응방안 제시”. 법  
이론실무연구. 제12권 제4호. 35-66.
- 오마이뉴스(2023.01.12.). “‘국민 ○○녀’라니 … 수지의 용기있는 반격”.  
<https://omn.kr/22dix>에서 2025.03.07. 인출.
- 윤옥경(2022). “제10장 비판범죄학과 여성주의 범죄학”. 범죄학개론. 박영사.  
298-330.
- 윤지영(2024). “생성형 AI 시대의 사이버범죄와 형사법적 대응”. 법학연구. 제34  
권 제1호. 373-399.
- 최순욱·오세욱·이소은(2019). “딤페이크의 이미지 조작: 심층적 자동화에 따른 사실  
의 위기와 폰크툼의 생성”. 미디어, 젠더 & 문화. 제34권 제3호. 339-380.
- 한겨레(2022.06.26.). “딤페이크 처벌법 시행 2년, 가해자들은 ‘아는 사람’을 노렸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48543.html>에서  
2025.01.01. 인출.
- 한겨레(2024.09.06.). “엔번방 때도 있던 딤페이크, 국가 방관과 텔레그램이 키웠다”.

-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57266.html>에서 2024.12.05. 인출.
- 한겨레(2024.12.17.). “인격 살해 범죄 ‘딥페이크’ ... 성범죄물 확대·재생산에 신상 퍼뜨려”.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73459.html>에서 2025.01.01. 인출.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2019). 2020 한국 사이버성폭력을 진단한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d4u.stop.or.kr/>에서 2025.01.31인출.
- 한민경(2024). “미디어 플랫폼 속 성적 인격권 침해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를 중심으로 -”. 미디어와 인격권. 제10권 제3호. 53-86.
- 홍영선·권현영(2021). “디지털 성범죄의 위장수사 쟁점과 과제”. 치안정책연구. 제35권 제2호. 175-221.
- 홍태석(2020). “딥페이크 이용 아동성착취물 제작자의 형사책임 - 일본의 판례 및 논의 검토를 통하여 -”. 디지털포렌식연구. 제14권 제2호. 139-151.
- Belknap, J.(2009). *The Invisible Women: Gender, Crime, and Justice*. Cengage Learning.
- Daly, Kathleen and Meda Chesney-Lind.(1988). Feminism and criminology, *Justice Quarterly*, 5:497-538.
- Ogle, Robbin S and Candice Batton.(2009). “Revisiting patriarchy: its conceptualization and operationalization in criminology”, *Critical criminology*, 17:159-182.

Abstract

## The Reality of ‘Deepfake Sexual Crimes’ based on Court Decision Analysis

Hyemin, Jo\*

This study analyzes the patterns of deepfake sexual crimes from a gender perspective based on court rulings. By reviewing 152 first-instance court decisions, the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perpetrators and victims, criminal acts, and trial outcomes.

The findings reveal that there were 159 perpetrators, but the presence of many unidentified (“name unknown”) perpetrators indicates that investigations did not fully account for all offenders. Victims were overwhelmingly female (98.7%), and the primary targets were acquaintances (40.25%) and celebrities (25.78%), suggesting an expansion of the category of ‘intimacy’ in digital gender-based violence. Regarding criminal acts, a common method involved collecting images from victims’ social media profiles or KakaoTalk profile pictures. Additionally, 56.60% of deepfake materials were created directly by the perpetrators. These materials often manipulated the victim’s face and body or included degrading text and personal information, exhibiting misogynistic characteristics. Notably, 18.24% of perpetrators operated Telegram channels, forming criminal networks. However, legal measures were insufficient, as offenses such as criminal organization were not applied in court rulings. A total of 88.68% of perpetrators were prosecuted under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yet 47.17% received suspended sentence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reality of deepfake sexual crimes and highlights the limitations in current legal responses. It emphasizes the need for feminist criminological discussions to strengthen legal measures against such crimes in the future.

**Keywords :** Deepfake sexual Crime, sexually manipulated content,  
Court Decision Analysis, gender-based violence,  
Feminist criminology

---

\* Graduate student, Dept. of Criminology, Korea National Police University